

종합 또 다시 ‘맹탕 국감’…막말만 남았다

“고영주 이사장은 10년 동안 공영방송 추행하고 강간한 인물”
자유한국당 방통위원들 향해 “통신 기록 제출하라”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사생활에 해당해” 자료 제출 거부 **3면**

종합 KBS·MBC 총파업 66일째

고대영 KBS 사장이 2009년 보도국장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도를 막았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5면**

오피니언 [칼럼] 적폐 청산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릇을 만들어야 콘텐츠가 담기는 데, 콘텐츠만 이야기하고 그릇을 만드는 노력은 폄하되거나 무시되고 있다. **7면**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방송기술저널

258호
2017년 11월 8일(수)

국민 10명 중 7명 ‘공영방송 불신’

‘KBS·MBC 파업’ 지지 65.4% VS 반대 24.0%

TV 수신료에 대해선 의견 분분…적정 34.1% VS 폐지 33.8%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공영방송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4%가 공영방송을 즐겨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고, 그 이유로 ‘보도 불신’을 꼽은 응답자가 71.1%에 달했다.(표2)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뉴스’가 28%로 가장 많았지만, 정작 공영방송 뉴스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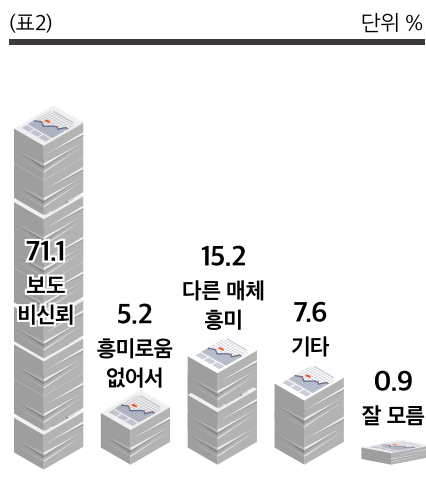
뢰도는 34.9%에 불과해 ‘신뢰하지 않는다(63.5%)’는 응답의 절반에 불과했다.

공영방송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시기로는 ‘이명박 정부(38.2%)’, ‘박근혜 정부(28.5%)’, ‘문재인 정부(16.2%)’, ‘노무현 정부(7.7%)’ 순으로 나타났다.(표3)

방송사별 신뢰도의 경우 EBS가 34.9%로 가장 높았고, KBS 22%, MBC 14%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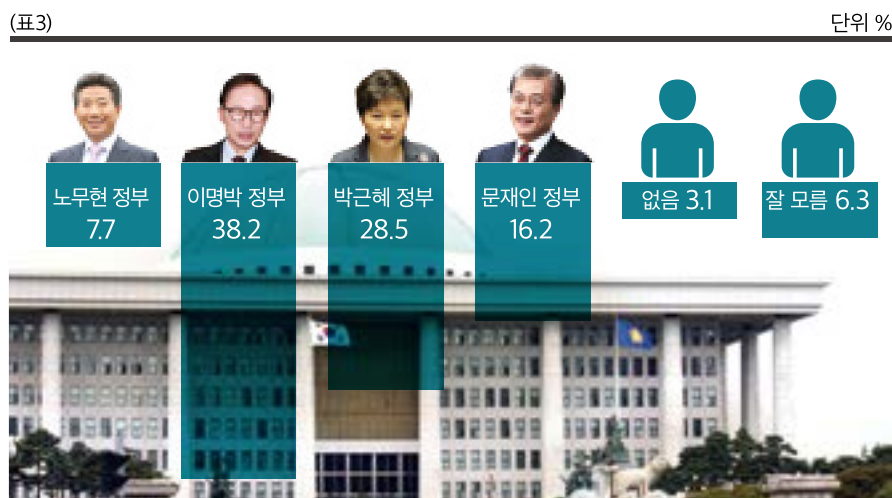
KBS와 MBC 파업에 대해서는 ‘지지한다(65.4%)’는 응답이 ‘반대한다(24%)’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월 2,500원인 TV 수신료에 대해서는 의



견이 엇갈렸다. ‘적정하다’는 의견(34.1%)이 가장 많았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33.8%)도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공영방송을



불신하고 그중에서도 뉴스 보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시기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를 지목하며 KBS와 MBC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 다수의 열망을 받들

어 하루속히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1,000명 대상, 무선전화(100%)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 ±3.1%p 오차다. **백선하 baek@kobeta.com**

MBC 정상화 ‘8부 능선’ 넘었다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가결…김장겸 해임도 초읽기



©뉴스1

방송문화진흥회가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안건을 가결하면서 MBC 정상화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 11월 8일 열린

는 임시 이사회에서는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기로 확정해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방문진은 11월 2일 19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 불신임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유기철, 이완기, 최강욱 이사는 10월 23일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결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방문진 사무처에 요청했다. 이들은 “MBC는 공정성, 신뢰도 등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뉴스 시청률은 2%대까지 떨어졌다”며 “MBC가 이렇게 된 일차적 책임은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있고, 방문진 대표로서 역할과 직무를 방기한 채 MBC 경영진의 잘못과 비리를 감싸고 비호해온 고 이사장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기 이사회에는 고 이사장 불신임 안건과 이사직 해임 건의안이 동일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야권 추천 인사인

김광동 이사의 항의로 두 안건은 분리 상정됐다. 야권 추천 인사인 권혁철 이사와 이인철 이사는 고 이사장 불신임 안건에 강력 반발하며 이사회 도중 퇴장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비밀 투표가 진행됐고, 찬성 5표·기권 1표로 고 이사장 불신임 안건은 통과됐다. 이로써 고 이사장은 앞으로 비상임 이사로만 활동하게 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60일째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MBC 언론인들과 함께 오늘 방문진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정상화의 주무기관이자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전 이사장인 고영주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까지는 고 이사장이 이사직을 그만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고

이사장은 10월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11월 2일 이사장 자리에서는 물러나겠지만 이사 자리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자진 퇴진을 요청하자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간주될 수 있기에 자진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권 추천 인사인 유기철, 이완기, 최강욱, 김경환, 이진순 등 5인이 11월 1일 제출한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는 11월 8일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논의된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은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을 위반하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왔다”고 지적했다.

만일 이날 열리는 임시 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이 통과된다면 1988년 방문진 설립 이후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해임된 사장이 된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 259호는 12월 13일(수)에 발행됩니다.

30
KOBETA since 1987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창립 30주년 및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초대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연합회는 매년 격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방송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방송기술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창립 30주년 및 방송기술대상 시상식에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11월 14일(화) 18시 30분
장소 | 한국방송회관 2층 코바코홀

“제4기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 국민의 뜻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방통위 정책방향 및 과제정립을 위한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다음 달이면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방통위가 후원하는 ‘제4기 방통위 정책방향 및 과제정립을 위한 의견 수렴 토론회’가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

사말을 통해 4기 방통위의 정책 기조를 간략히 설명했다. 고 상임위원은 “오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방통위 직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며 “오늘 나온 의견은 4기 방통위 과제에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방통위의 정책 과제가 여전히 두루뭉술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강 대표는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재허가의 경우에도 국민 다수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요구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통위는 구체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강 대표는 공영방송의 정상화 및 공공 서비스의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매체 균형 발전이라는 보호 장치를 뒀고 현재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라며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계속해서 배타적 정책을 해온 이전 정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으로써 공영방송의 점유율은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한 수준으로, 직접 수신 환경 개선 및 MMS 등을 통해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공영방송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의 권리와 권익 역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방송의 제작 자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심 교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의 내용 중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작 자율성이라는 게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만들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장의 합리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간접 광고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위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가상 광고의 형식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 광고와 협찬 고지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 민생 부담 해소를 위해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규 창작 분량 기준을 설정하고 △급박한 생명·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개인정보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하는 한편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구축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1년→2년)을 추진하고 △공익채널 선정 시 지역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선정 기회를 부여할

이어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제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제작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런 제작 실무자의 제작 자율권과 노사동수의 위원회는 다른 문제”라며 이 두 가지를 묶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작 자율권을 개선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외에도 미디어의 지역별 균형 발전과 지역성 확보, 시청자 의견의 적극적 반영, 결합상품 시장의 명확한 시장 확정,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등 전문가로서 참석한 토론자들뿐만 아니라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이현 방통위 창조기획담당관은 “방통위가 인력, 기능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다 보니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데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 같다”며 “오늘 나온 의견은 상임위원 분들과 잘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방통위, 연내 지상파 MMS 법적 근거 마련 방송 광고·협찬 고지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할 것

지상파다채널방송(Multi-Mode Service, MMS)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방송 광고·협찬 고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3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MMS는 현행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어 그동안 시범 서비스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MMS 본방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방통위는 “MMS 도입 대상 사업자, 승인 심사 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령 개정을 마련한 뒤 추진할 것”이라며 “신규 제작 애니메이션, 외주제작비율 등 기존 지상파방송보다 완화된 편성 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따른 편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 광고·협찬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 “공·민영 방송사 특성에 맞는 별개 심사 이뤄져야” 심사 실효성, “사업자 버티기 없게 엄격해야” vs “사업자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있어 공·민영 방송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심사가 이뤄지는 데에 근본적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한국언론정보학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의 실효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재허가 심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심사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재허가 심사를 살펴보면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이 중 몇몇 사항은 많은 공감을 샀으며 활발한 토의가 펼쳐졌다.

우선, 방송사의 소유 구조와 경영 형태에 따른 특

성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김동원 정책국장은 “민영방송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공영방송은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적 및 계획을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심사 항목과 배점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낙준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동감 의사를 밝히며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KBS의 경우 재허가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기구가 폐지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민영 방송을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있는 것이다.

심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이명박근혜 정권 10

년을 거치면서 재허가 제도의 상당 부분이 후퇴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방에서조차도 과거에 그나마 존재했던,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의 책무와 의무, 공공성을 재점검하는 기회, 설립 목적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기회를 사실상 상실했다”고 말했다.

재허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재허가를 거부하거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통과례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다. 김동원 정책국장 역시 “재허가 거부가 이뤄지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으니 OBS 사태처럼 재허가 조건만을 부여받으며 사업을 지속하고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낙준 과장은 “OBS에 재허가 거부를 한다면 그 뒤에 누가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플랫폼보다 콘텐츠가 중요해진 다매체 시대에 방송사의 위기와 맞물려 가지는 현실적 고충을 털

어놓았다.

또한, 고 과장은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실적 문제”라고 밝혔다. “재허가 거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열심히 일해 온 종사자들”이라며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칼을 가지고 있지만 칼을 쉽게 쓸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상시대 교수는 이러한 고민에 공감하며 “재허가 심사에 있어 종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이제는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또, “재허가 심사를 단순히 엄격하게 해야만 한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허가를 엄격하게 할 경우, 행정기관의 사업자 길들이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방송사가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심사가 자칫하면 정부에 비판적 언론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전락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숙희 sh45@kobeta.com

출구가 보이지 않는 OBS

OBS, 복직자 교육 발령?

OBS 노조 “제작 현장으로 원직 복직 시급”

OBS 사측이 11월 1일 날짜로 복귀하는 14명의 직원을 원직이 아닌 교육 발령으로 내 논란이 일고 있다.

OBS는 앞서 지난 8월 1일 정리하고 철회를 발표한 바 있다. OBS 사측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7월 21일 “OBS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열흘 뒤인 8월 1일 정리해고를 철회했다.

문제는 제작 현장의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복직하는 직원들을 교육 발령으로 냈다는 점이다. 사측은 10월 31일 복귀자들에게 통지문을 보내 ‘교육 발령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교육 내용으로는 △OBS 프로그램 연구 및 모니터 보

고서 작성 △OBS 발전 방향 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 등을 예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는 11월 1일 성명을 통해 “복직한 직원들이 아무리 1년 정도 제작 현장을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평균 방송 경력만도 20년이 넘는 베테랑”이라며 교육 발령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교육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연구 과제, OBS 발전 방향에 대한 조별 토론 등은 마치 신입사원 연수를 연상시킨다”며 “누가 봐도 20년차 전후의 경력을 가진 직원들에게 맞는 교육이라고 할 수 없기에 발령 의도를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OBS 노조는 이번 복귀자 교육 발령을 또 다른 형태의 ‘변형된 정리해고’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교육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며 “그저 모욕감이나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려 회사를 나가게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OBS 노조는 9월 12일 김성재 전 부회장이 피고소인 조사 차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는 시간에 맞춰 ‘노조 탄압, 방송 파탄’을 외치며 집회를 개최했다.

OBS 백성학 회장 또다시 임금 반납 요구 OBS 노조 “백성학 회장 퇴진해야 OBS 살릴 수 있어”

OBS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임금 10%를 반납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또다시 전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는 10월 25일 성명을 통해 “백성학 회장이 제시한 임금 반납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은 OBS가 백성학 회장 개인에 의해 좌

지우지돼선 안 된다”고 선언했다.

앞서 백 회장은 지난 10월 11일에도 서신을 통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차로 1년간 급여 10% 반납 필요’, ‘급여 반납 시점부터 호봉 승급 동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OBS 노조는 해당 서신에서 백 회장이 밝힌 경영 지표가 모두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서신에 표

기된 9월 광고 매출은 14억 원으로 실제 매출과 5억 원 정도 차이가 났고, 10월 목표치는 기존 예상치인 20억 원에서 크게 후퇴한 14억 원으로 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OBS 노조 관계자는 “내년 4월이면 자금이 바닥난다고 하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매출 실적이 실제와 다른 허위 숫자로 표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OBS 노조는 “백 회장이 조작된 데이터로 버젓이 회사를 위기로 몰고 가는 상황을 일반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수년째 영업현금 흐름이 흑자고, 부채가 한 톨도 없는 OBS가 어떻게 경영상 위기에 걸 수 있냐고 오히려 전문가들이 반문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 2주가 안 되는 기간에 두 번이나 직접 서신을 발표하며 백 회장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바로 충성사약을 통한 조직 쫓 세우기와 노조 파괴에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OBS 노조는 “오로지 자신의 경영권만 방어하고 방송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백 회장의 욕망이 OBS가 뻗어 나갈 모든 가능성을 봉쇄한 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며 “이번 서신을 통해서 백 회장의 퇴진만이 OBS의 살길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20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또다시 ‘맹탕 국감’...막말만 남았다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지만 또다시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정상화·적폐 청산’이라는 이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어 후반기 국감 전체를 집어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10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BS, EBS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시작했지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발언과 태도를 놓고 격돌하면서 정회를 거듭해 마지막 날까지 감정싸움을 벌였다.

**고영주 이사장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고성
신경민 의원 “고영주 이사장은 10년 동안 공영방송 추행하고 강간한 인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공영방송’이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등장해 처음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10월 27일 방문진 국감 당시 보이콧으로 국감 현장에 없었던 박 의원은 신 의원이

고 이사장의 태도를 지적한 것을 두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고 이사장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했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과방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던 신 의원은 “(방문진 이사장으로) 처신과 발언에 조심하셔야 한다”며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정당에 연사로 출연한 것이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 이사장은 “증인이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 되물은 뒤 신 의원을 향해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지금 증인에게 그런 식의 말투가 어디 있느냐”고 되받아쳤다.

신 의원은 “(그날 고 위원장이) 저한테 오히려 똑바로 하라고 했다”며 “대통령도 장관도 국감장에 오면 위원장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분개했다. 신 의원은 이어 고 이사장을 향해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을 추행하고 강간해 오늘날의 상황을 만든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의 강도 높은 발언에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다. 30분 만에 속개된 뒤 박 의원은 “신 의원의 막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당 명의로 제소할 수 있도록 과방위

전원이 원내지도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이 격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당에서 신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우 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방통위원들 향해 “통신 기록 제출하라”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 “사생활에 해당해” 자료 제출 거부**

이어진 국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압박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10월 26일 한국당 의원들이 방통위에 갔을 때 방통위원장께서는 분명 “나나 여권 의원들이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고,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는 질문에 “여러분도 짐작하시지 않느냐”고 말했다”며 “우리가 짐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저를 아끼는 방송계 사람들”이라며 “특정한 정치인은 없었다”고 답했고,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치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허 부위원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둘 다 똑같은 답변을 하자 “전화가 온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당당히 시면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이 위원장과 허 부위원장의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이 위원장께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들 궁금해한다”며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위원장과 허 부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 등 방통위원의 통화 내역과 문자 내용 등을 다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의원은 이어 KBS 1TV ‘김정은의 두 얼굴’편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김정은의 두 얼굴’ 방송을 보셨나”며 “KBS가 김정은을 ‘재치 있고, 틀을

깨며, 위험을 감수하는 혁명가’로 ‘생각보다 저평가된 지도자’라고 했는데 공영방송인 KBS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옳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는 방심위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한 뒤 “김정은을 꼭 찬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적도 잘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답변에 신상진 과방위원장은 “일반적인 생각이 어떤 것이냐, 뭐가 편파적인 것이냐, 이게 안 좋은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민주당 의원은 신 위원장의 질문에 유도성이 반영돼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자 신 위원장은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은 20여 분 뒤에 다시 속개됐지만 자료 제출을 놓고는 여야의 시각이 엇갈렸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민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국감이 파행까지 빛은 원인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라며 “당시 과방위원을 포함한 원내대표단이 같이 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분명 외압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고, 외압 실체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생활 때문이라면 전화번호 등을 삭제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하는 게 맞지만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통화 기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열람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 내역과 위치가 다 나오는 것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화 자료는 본인이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先방송법 처리, 後인사’ 안 돼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방송법 조속한 처리 촉구”

언론노조 “이번 기회에 정치적 독립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올해 초반 하더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를 놓고 ‘뜬금없는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11월 3일 성명을 통해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MBC 김장겸, KBS 이사회 이인호, KBS 고대영을 줄곧 비교해 온 한국당과 이를 방조해온 바른정당, 심지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해 온 국민의 당까지 합세해 ‘先방송법 처리, 後인사’를 주장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정치권이 뜬금없는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

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재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책임자 임명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 한국당은 올해 초까지도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발언을 하자 입장을 바꿔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11월 3일 최고위원회에서 방송법 처리를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된 데에서 방문진의 밀어붙이기식 폭거가 진행됐다”며 “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예 속도를 뚫으로써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입법으로 막아내고 바로잡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 대행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권에서는 편향적이었고 이번 정권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라며 “자기들이 낸 법안을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 사람 심는 것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그 시도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낸 방송법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고영주 이사장 해임은 지난 10년간의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매우 환영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영방송의 구조적인 문제를 위해서라도

선 법 개정, 후 인사라는 원칙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주장에 언론노조는 “방송법과 노조법을 위반하거나 뇌물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을 법과 절차에 따라 해임하고 그 빈 자리를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것이 방송장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터져 나온 국민들의 ‘언론 적폐 청산, 공정언론 실현’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언론에 개입하거나 장악할 수 없도록 ‘정치적 독립’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야3당이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2013년 논의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고, 특히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신상진 국회 과방위원장을 앞세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며 상임위 안건으로 다루는 것도 막아섰는데 이제 와서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문진 보궐이사에 김경환·이진순 선임...여야 구조 재편

언론노조·민언련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퇴한 유의선·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후임으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상임이사장을 선임했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12일까지다.

방통위는 10월 26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방문진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방통위는 보궐이사 2명을 10월 30일자로 임명했다.

앞서 유의선 방문진 이사는 9월 8일 사퇴했다. 유이사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의 이사로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총파업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구 여권 추

천 인사인 유 이사에 이어 김원배 이사로도 10월 18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이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선정한 ‘언론 부역자’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방통위가 보궐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방문진 이사 구성은 기존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조에서 보수 4명, 진보 5명의 구도로 재편됐다.

방통위가 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방통위를 향의 방문했으나 방통위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언론노조는 “한국당은 당명을 ‘몰염치당’으로 바꾸는 게 어떠한가”라며 “방통위가 방문진 보궐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법 제12조에 따른 방통위의 정당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한국당은 사퇴한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의 후임을 추천할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면서 오늘 국회의 KBS 국정감사를 파행시켰다”며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임명한다”는 방문진법 제6조의 내용을 몰라서 하는 주장이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신들이 망친 공영방송의 정상화마저 방해하려고 국감을 불모잡는 생떼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방송기술용어

tbh to be honest

tbh(to be honest)는 일종의 인기투표 애플리케이션이다.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Miknight Labs가 개발한 앱으로, 이용자의 연락처와 연동해 tbh가 미리 정해 놓은 질문에 지인 4명 중 1명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다. 예를 들어, ‘가장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은?’, ‘최고의 미소를 가진 사람은?’ 등의 질문에 4명의 친구 중 1명을 선택할 수 있다. tbh의 가장 큰 장점은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을 막기 위해 익

명으로 투표하고 모든 질문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tbh가 미리 작성한 질문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직접 질문을 만들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9월 초 정식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는 앱으로 주이용층은 청소년이다. 이러한 tbh를 지난 10월 페이스북

(Facebook)이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은 약 19억 명의 이용자를 가진 최대 소셜 미디어로 꼽히고 있으며 지난 2012년 4월 인수한 인스타그램(Instagram) 역시 약 7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Piper Jaffray가 공개한 청소년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소셜 미디어로 스냅챗(Snapchat)이 선정됐으며 선호도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0대와 20대 초반 연령층에서 스냅챗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호응하듯 스냅챗은 증강현실 기반의 3D 인터랙티브 ‘월드 렌즈’를 추가하는 등 계속해서 혁신적 서비스 출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이스북의 tbh 인수는 청소년 이용자를 확보하고 해당 이용자를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bh의 경우 사이버 불링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이 선호하는 제품이나 콘텐츠와 관련해 설문 조사 톨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속희 sh45@kobeta.com



20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방송 시장,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

지상파 광고 매출 1,027억 원 감소

CJ E&M과 종편 광고 매출 576억 원 증가

방송 광고의 무게 중심이 지상파에서 종합편성 채널로 이동하면서 광고 시장에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서 제출받은 ‘방송사별 방송 광고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올해 8월 말까지 9,3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1조410억 원보다 1,027억 원(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CJ E&M과 종편의 광고 매출은 5,399억 원에서 5,975억 원으로 576억 원(10.7%) 증가했다.

특히 JTBC는 올해 1,45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2.6%가 상승한 반면 MBC는 지난해 3,278억 원에서 올해는 2,712억 원으로 17.3% 정도 감소했다.

코바코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판매 대행하는

SBS 등을 제외한 방송사들의 올해 방송 광고 매출을 9,840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전년 대비 12% 내외의 감소폭을 예상하고 있다.

방송 광고 시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주의 ‘저비용 고효율’ 광고 선호에 따라 모바일 광고 시장에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모바일 광고는 지난해 1조7,45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1조6,123억 원의 방송 광고 시장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하지만 지상파는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는 등 매체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지상파의 평균 시청률 합산 수치는 2007년 19.5%에서 지난해 14.2%로 5.3%가량 떨어진 반면 CJ E&M과 종편 등 케이블의 평균 시청률 합산 수치는 11.7%에서 17.9%로 6.2%가량 증가했다.

방송 광고 매출 감소에 대해 코바코는 “비상영업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방송 광고 매출 제고에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고효율 광고



상품의 판매 제고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에 안정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상파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방송사들은 급변하는 미디

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소관 부처는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간 비대칭 규제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KBS·MBC 파업으로 광고 수익 380억 원 감소

박홍근 의원 “지역·중소 방송사 매출에 직격탄”

KBS와 MBC 파업이 66일째 접어든 가운데 두 회사의 광고 수익이 파업 기간 동안 38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두 방송국의 파업이 지역·중소 방송사의 광고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4일 파업 시작 이

후 10월 23일까지 결방 때문에 감소한 광고 수익은 KBS가 70억 원, MBC가 310억 원이었다.

방송 광고는 특정 프로그램 전후에 방송을 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면 광고도 나갈 수 없다.

KBS의 경우 1~2주간 〈해피선데이〉, 〈해피투게더 3〉 등의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됐으나 MBC는 파업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한도전〉, 〈나혼자산다〉, 〈복

면가왕〉 등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 중이고, 최근에는 드라마까지 결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송희경 의원실에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결방된 MBC 프로그램은 보도 85건, 교양 43건, 오락 50건 등 모두 178건에 달한다.

문제는 KBS와 MBC의 광고 판매액이 감소하면서 결방 판매되고 있는 중소·지역 방송사의 광고 매출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KBS와 MBC 파업으로 인한 지역·중소 방송사의 매출 감소액은 약 54억 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고 말했다.

10월 31일 국감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네이버의 부당 뉴스 편집을 꼬집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청탁받고 관련 기사를 빼준 조작을 아느냐”고 물었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에 왜 삼성 방송국, 현대신문사, SK라디오가 없는 줄 아느냐”며 “재벌이 언론까지 가져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어 “기사 배치를 바꾸고 불리한 기사를 빼라는 압력이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의장은 “해외에서 접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네이버를 언론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뉴스를 생산하지 않아 기존의 언론과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선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이 전 의장은 “한 대표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들었지만 급히 해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의 답변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에 있었다’ 이런 식의 거짓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의장을) 마치 죄인인 양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 의원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추혜선 “MBC 뉴스는 경영진 성명서 게시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방송 사유화 아니다” 반박



MBC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MBC 뉴스 프로그램이 경영진의 입장 발표

했다. 또 스포츠 뉴스의 편집 부서를 한성숙 대표가 주재하는 사내 투명성위원회 산하로 옮기고 부당 청탁을 수용한 관계자에게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한 대표는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한 대표는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네이버가 그간 약속해온 투명성이 훼손됐고, 이와 관련해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최선을 다해 근본적으로 뉴스 편집 조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 플랫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

를 위한 게시판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강도 높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0월 27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MBC 〈뉴스데스크〉 보도 중 MBC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MBC 경영진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전달하는 기사가 49건 이상”이라며 “MBC가 김장겸 주식회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 등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던 2월 초,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이 이루어졌던 6월 말부터 7월 초 그리고 MBC 파업 돌입과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9월 초에 특히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가장 먼저 등장한 성명서는 1월 13일이었다.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이 안광환 전 사장과 정운회 씨의 독대 사실에 관한 기사를 내보내자 MBC는 ‘MBC의 요구사항’을 화면에 띄우고 MBC가 발표한 입장을 거의 그대로 읽는 수준의 보도를 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서는 5건의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또다시 뉴스에서 앵커부터 기자까지 MBC 측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수준의 보도를 했다. 아예 화면도 성명서 내용으로 채웠고, 자사 성명서로 부족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꼭지를 만들어 내보냈다.

KBS, MBC 파업,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이 있던 9월에는 총 13건의 리포트를 내보냈고, 이때 또다시 MBC의 성명을 낭독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추 의원은 “방송사가 자사의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때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야지 뉴스 프로그램을 그런 용도로 사유화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게 “이런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고 이사장은 “방송 사유화를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되물은 뒤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방송하는 것은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신경민 의원 “공공기관에 구형 UHD TV 납품” 지적

2017년 공공기관 납품된 유럽식 UHD TV 삼성 69.7%, LG 94.1%

2017년 공공기관 납품 UHD TV 납품 내역			
	유럽식	미국식	합계
삼성전자	5,547(69.7%)	2,407(30.3%)	7,954
	55억 원	28억 원	83억 원
LG전자	4,036(94.1%)	252(5.9%)	4,288
	47억 원	3.2억 원	50.2억 원
합계	9,583(78.3%)	2,659(21.7%)	12,242
	102억 원	31.2억 원	133.2억 원

올해 공공기관에 납품된 초고화질(UHD) TV 중 78%가 국내 표준과 다른 유럽식인 것으로 확인돼 논

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UHD TV 공공기관 납품 내역’을 살펴본 결과 올해 공공기관에 납품된 1만2,242대의 UHD TV 중 9,583대가 정부가 채택한 표준과 다른 유럽식이었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UHD 방송에 적용될 표준 방식을 북미식인 ATSC 3.0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방송사, 삼성전자 등 가전사, 연구기관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 UHD 방송 표준방식 협의회를 구성해 북미식인 ATSC 3.0과 유럽식인

DVB-T2를 비교·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북미식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유럽식 DVB-T2 방식이 적용된 UHD TV로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2013년형부터 2016년형까지 적용 가능한 지상파 UHD 수신 키트를 6만 9,000원에 판매 중이고, LG전자 역시 4포트 HDMI 셀렉터에 웹OS 기반 스마트 기능까지 갖춘 지상파 UHD 셋톱박스를 6만 9,000원에 판매 중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는 미국식 UHD TV가 판매되고 있으며, 일반 매장에서도 미국식 표준이 적용된 UHD TV 구매가 권장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러한 일반 매장 운영과 달리 가전사는 올해 공공기관에 유럽식 구형 UHD TV를 9,583대나 공급했다”며 “결국 공공기관의 잘못된 구매로 지상파 UHD 방송을 보려면 별도의 셋톱박스를 구

매해야 하는 등 국민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납품한 7,954대의 UHD TV 중 69.7%가 유럽식이었으며, LG전자는 4,288대 중 94.1%가 유럽식이었다.

신 의원은 “회수된 줄 알았던 유럽식 UHD TV가 공공기관에 버젓이 납품된 것을 보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고·털어내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가전사답게, 유럽식 UHD TV 구매자 피해 보상과 더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공공기관에 제대로 된 표준 제품 구매 안내를 안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 UHD TV 구매 관련 안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KBS·MBC 총파업 66일째

고대영 KBS 사장, 국정원 200만 원과 기사 맞바꿨나?
국정원 개혁위 “고대영 사장 불보도 협조하고 200만 원 받아”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시스

고대영 KBS 사장이 2009년 보도국장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도를 막았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KBS·MBC 정

화 시민행동은 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0월 23일 국정원 적폐정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KBS 담당 정보관

KBS, 서훈 국정원장 등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정원 허위 사실로 KBS의 중립성, 공정성 훼손돼”

KBS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KBS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허위사실 공표로 KBS의 중립성, 공정성 등이 훼손됐다”며 “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KBS는 고소장을 통해 “2009년 5월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

평창 동계올림픽 방송 ‘올스톱’ 되나?

KBS 파업 장기화 조짐…KBS 제작 UHD TV 국제신호 중계 제작 무산 위기



‘고대영 사장 퇴진’을 외치며 시작된 KBS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전 중계가 무산되는 등 올림픽 방송 전면 중단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당초 KBS는 10월 18일부터 나흘간 펼쳐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대표 선발전을 중계 방송하기로 했으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 소속 스포츠국 PD와 기자 등이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해당 중계방송은 무산됐다. 문제는 파업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파행을 겪을 것으

‘TV 수신료 연합 할인 제도’를 아시나요?
오세정 의원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 지적

TV 수신료 연납 할인 제도가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10월 30일 “TV 수신료 연납 할인

제도가 마련된 1973년부터 제대로 시행됐다면 국민들이 수천억 원의 혜택을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63년 1월 1일부터 수신료를 걷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 오르다 1981년 컬러TV에 한해 월 2,500원씩 걷게 되는데 그 이후 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 사찰’ 공영방송 넘어 SBS까지
SBS ‘논두렁 시계’ 보도 진상 조사 실시



SBS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와 SBS 방송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SBS 노사 양측은 10월 27일 열린 공정방송실천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발표 내용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 공공성이 강조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상파방송인 SBS가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과 정치 공작의 수단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11월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진상 조사는 국정원 개혁위 발표에 따른 것으로 앞서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요원들이 2009년 4월 즈음 당시 SBS 사장이던 하금열 씨와 접촉해 노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 요원들이 하 전 사장을 만났다는 시점은 2009년 5월 13일 SBS 8뉴스의 ‘논두렁 시계’ 보도가 나오기 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국정원 개혁위는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한 SBS의 취재가 국정원과 연관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하 전 사장과 최금락 당시 보도국장이 이후 이명박 청와대의 대통령실장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변신하면서 사내에서조차 의혹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년 전 보도 과정에 대한 의혹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SBS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도 사측은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상황 악화를 방조하다시피 했다”며 공방협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착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SBS 노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노조는 전직 사장까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고, 조사 과정과 방법의 한계로 인해 밝히지 못하는 부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의뢰해 서라도 명명백백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했고 사측은 이를 수용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이 2009년 5월 7일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를 협조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KBS 담당 정보관이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불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자금결산서·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당시 KBS 보도국장의 현금 수수와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불보도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를 비롯한 KBS 내부 직능단체들은 당장 반발했다. KBS 새노조는 10월 23일 성명을 통해 “고 사장은 분명 부인할 것이 뻔하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났듯이 고 사장의 과거 행각도 금방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며 지금 당장 제기된 엄청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KBS 경영협회와 기자회견도 성명을 발표했다. KBS 경영협회는 “고 사장의 자진 사퇴로 흐지부지 끝날 일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시정자들로 부터 조롱과 연민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KBS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진

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의 진술에만 근거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이와 같은 허위 사실 공표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존재 의의를 뒤흔든 위중한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KBS는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로 보인다는 것이다. KBS 새노조는 “11월 1일이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까지 G-100일로 다양한 올림픽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할 예정이었는데 대부분 취소되거나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KBS가 사상 첫 UHD TV 국제신호로 중계하기로 한 일부 종목의 국제 방송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했다. 디지털 전환과 마찬가지로 화질과 음향 등 방송 서비스 질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상태인 만큼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UHD 방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KBS는 이번 동계올림픽 컬링 종목 중계를 UHD TV 국제신호로 제작하기로 IOC와 계약

금까지 동결돼 왔다. TV 수신료 연납 할인 제도는 1973년 옛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도 6개월 연납 시 1,250원, 1년에 2번 연납 시 한 달 분인 2,500원 할인해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오 의원은 “정부와 한전, KBS가 수신료 할인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한전과 KBS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관련 징수 시스템이

KBS방송기술인협회 “감사원 감사, 징계 대상은 정부와 경영진”
“회사는 실무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호해야”

KBS방송기술인협회는 ‘감사원 감사, 징계의 대상은 정부와 경영진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감사원의 실무자 문책 요구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감사원의 KBS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UHD 송신기 구매에 있어 송신기가 중대한 기능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없이 구매를 진행해 UHD 방송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계약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실무자 3명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기술인협회는 이를 반박하며 이번 문제는 단순히 실무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시간 속에 UHD 방송 개시일을 무리하게 맞추다 보니 일어난 예견됐던 사태라고 꼬집었다. 기술인협회는 “무리한 UHD 본방송 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UHD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UHD 정책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경영진이라고 주장했다. UHD 표준 방식이 지난해 6월에 미국식으로 결정되고 이를 적용한 송출 장비를 개발하고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 5월까지 송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으며, 이를 지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리한 일정을 강요받았다는

실 규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기자회견회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200만 원이라는 국정원의 검은돈에 팔아버린 최악의 스캔들이 될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전락시켰다면 고 사장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는 물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11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KBS 안팎이 국정원-고대영 커넥션 폭로로 들끓는 와중에 고 사장은 10월 30일 출국해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며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짓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 대중의 관심이 멀어질 때까지 도피해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고 사장 귀국 즉시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BS는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을 당사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새노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KBS는 “KBS 새노조와 일부 인터넷 매체들의 KBS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KBS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했으며, 또 동계 패럴림픽 일부 종목 중계도 국제신호로 제작하기로 했다. KBS 새노조는 “KBS 파업이 계속될 경우 UHD 국제신호 제작을 위한 각종 사전 준비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제신호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대표 신호로써, KBS 파업이 계속되면 동계올림픽 컬링종목 UHD와 동계패럴림픽 종목 일부가 전 세계에 방송되지 못하는 사태마저 우려된다”고 밝혔다. KBS 새노조는 “우리 조합원들을 비롯해 공영방송인 KBS의 모든 구성원들은 너무도 간절하게 동계올림픽 방송과 중계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싶다”며 “하루라도 빨리 고대영 사장이 퇴진하도록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없이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한전과 KBS에서는 국민들이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시스템 부재로 할인 적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수신료 징수 통계가 존재하는 1981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 총액은 13조406억 원이며, 이 기간 연납 할인 제도 적용이 가능한 금액은 12분의 1인 1조 8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실무자의 의견을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바람직한 업무 환경을 조성했어야 할 KBS 경영진이 단순히 의견서만 전달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인협회는 “감사원이 신기술 도입에 다른 업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원론적이고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는 구매계약 시 대금을 납품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구매계약을 부실·조잡하게 이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반박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UHD 방송을 시행하면서 방송 장비 역시 세계 최초로 제작되기 때문에 품질을 구매계약 체결 이전에 검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해라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술인협회는 “회사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세계 최초 지상파 UHD 송출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바친 직원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은 회사의 마땅한 도리”라며 “회사는 감사원의 부족한 이해를 바로잡고,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에 상심하고 있을 해당 기술인이 다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호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속희 sh45@kobeta.com

KOC 2017

인공지능과 미디어의 미래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Media

일시
2017. 11. 14(화)
10:30 ~ 17:00

장소 : 한국방송회관 2층 코바코홀 * 사회 _ 주혜빈 아나운서 * 축하공연 _ 가수 손지연, 강주원

주제 : 인공지능과 미디어의 미래



Insight 01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 전략
송민정 _ 한세대학교 미디어광고학과 교수



Insight 02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의 미래
조영신 _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Session 01 _ 인공지능 & 서비스
네이버-라인의 클라우드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Clova)를 만나다
성장현 _ 네이버 Clova Business
Development 담당



Session 01 _ 인공지능 & 서비스
미디어와 라이프 스타일
임성희 _ 아이리버 서비스본부장



Session 02 _ 인공지능 & 콘텐츠
AI 시대의 콘텐츠 제작과
소비
전운호 _ 알티캐스트 시사업 TF장



Session 02 _ 인공지능 &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비즈니스의 변화
김준환 _ 콘텐츠연합플랫폼 pooq 대표

주최 및 주관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교육원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참가비 무료 : 사전등록자에 한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경품 : 스마트패드, 네이버웨이브, 외장하드 외 다수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폐 청산

칼럼



오건식
SBS 뉴미디어개발팀 부국장

‘적폐 청산’. 이 단어는 2017년 하반기 현재의 핵심 키워드다. ‘적폐’는 영어로 ‘Augean Stables’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단어로써, 아우게이아스(Augeas) 왕의 3,000마리에 달하는 소 외양간(Stables)을 30년간 청소하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 단어다.

얼마 전 지인의 딸 결혼식에 갔었다. 주례사에 ‘4차 산업시대의 도래’란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청춘 남녀가 교제를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말씀인 주례사에 뜬금없이 4차 산업이란 단어가 나와서 조금은 황당했다. 4차 산업 전의 결혼 생활과 4차 산업 도래 이후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도통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인공지능이 결혼 생활 양태를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말인지. 생각해보면 기념사 등에 별 의미 없이 그 당시를 풍미하는 단어를 끼워 넣는 것이 관례로 자행(?)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학적 관행 자체가 일종의 적폐는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적폐 청산’. 이 단어는 2017년 하반기 현재의 핵심 키워드다. ‘적폐’는 영어로 ‘Augean Stables’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단어로써, 아우게이아스(Augeas) 왕의 3,000마리에 달하는 소 외양간(Stables)을 30년간 청소하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 단어다. 3,000마리 소의 똥을 30년이나 방치했다면 그 냄새를 비롯한 폐해는 안 봐도 비디오다. 올해가 1987년 체제의 만 3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상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이라고들 하는 것과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헤라클레스가 강물을 끌어다가 외양간을 청소했다고 한다. 그 당시의 레알 적폐 청산 방법이었다. 이는 헤라클레스의 12 과업 중에 5번째 일 정도로 큰 업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아우게이아스 왕은 하루 만에 청소를 해주면 자기가 소유한 가축의 1/10을 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한다. 물론 아우게이아스 왕의 최후는 안 좋게 끝난다.

요즘에도 거의 매일 미디어에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기사나 보도 영상을 접한다. 이전에 ‘우짜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어리둥절했던 사건들의 세세한 윤곽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단독]들을 통해 막연히 생각했던 적폐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헤라클레스가 했던 것처럼 적폐 청산의 도도한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에 정의감에 불타는 필자가 또다시 나섰다. 최소한 방송기술계의 적폐는 우리 방송기술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해소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으로. 그래서

여러 명의 지인을 접촉하면서 물어보았다. “방송기술계의 적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방송기술계 자체의 심각한 적폐는 ‘없다’이다. UHD TV의 방식 선정이 너무 조급했다든지, DMB의 수익 모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든지, 언제까지 디지털 라디오 도입을 외면할 것인지 등등 기술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주로 정책적 이슈가 주를 이룬다. 방송 방식의 결정 과정 등에서 보듯이,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제시한 바와는 동떨어진 결정들은 꼭 나중에 문제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합해보면 적폐는 주로 정책결정자들이 만들었고, 엔지니어들은 저질러진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다. 당연하게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정책에 반영이 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도 여러 차례 전문가들에 의해 경종이 울려졌던 사안들이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과는 달리 정작 시행되는 정책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경우를 그동안 너무 많이 겪었다. 이공계의 전문가는 쉽게 양성되지 않는다. 대학에서도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등록금을 요구한다. 졸업 후에는 더 큰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DTV나 UHD TV의 달콤함 뒤에는 방송기술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릇을 만들어야 콘텐츠가 담기는 데, 콘텐츠만 이야기하고 그릇을 만드는 노력은 편하게 되거나 무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XX전자의 직원을 연봉이 얼마어마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XX전자의 직원들이 야근을 밤 먹듯 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필자가 꼭 XX전자에서 연락을 바라고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이야기는 실화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하면서 실제로 해 본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생생한 예다. 마치 전문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엇을 해 낸 것을 무용담인 양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그나저나 다스(DAS)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회사에 DAS(Digital Archive System)라고 있는데, 그럼 혹시 SBS 것 인가요?

사설

‘공영방송 정상화’, 당리당락의 대상이 아니다

‘공영방송 KBS, MBC 정상화’를 위한 방송 종사자들의 파업이 2달을 넘어섰다. KBS, MBC 구성원들은 지난 9년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공영방송 KBS와 MBC를 주인인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일념으로, 본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떠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도 마다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으며,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공영방송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주된 책임이 방송 종사자들에게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랜 시간 공영 방송사의 이사진 선임 구조는 권력을 쥔 여권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구조적으로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선임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런 편파적 문제점은 분명히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며, 진보 정권 시절에는 보수 정당 측에서, 보수 정권 시절에는 진보 정당 측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방송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권을 장악하면 방송법 개정은 언제 외쳤냐는 듯 모르쇠로 태도를 바꿔왔다.

이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건대 공영방송 훼손의 주된 주체는 낙하산 사장에 끊임없이 저항해온 방송 종사자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자세를 달리했던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 부재와 오로지 당리당락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이런 오랜 관행은 이번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의 과정에서도 다시 빛을 발

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야3당은 그동안 ‘방송장악법’이라고 극렬히 반대하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갑자기 여권의 방송장악 방지를 위한다며 ‘방송법 개정 조속 처리 합의’를 밝히며 자기모순적 주장을 했다. 그들이 내려보낸 KBS, MBC 사장들의 교체목전에 이른 듯한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이를 지연시키는 목적이라는 해석과 함께, 여전히 국민보다는 당리에만 목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기만 하다. 반면에 야3당이 주장하듯, 청와대와 여권 또한 본인들이 지난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권을 잡자마자 재수정해야 한다는 소위 ‘내로남불’형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언론적폐 청산’과 ‘방송법 개정’은 순서의 차이일 뿐,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조속히 완료돼야 할 과제다. KBS, MBC 구성원들이 매서워지는 찬바람 속에서 여전히 ‘공영방송 복원’을 외치고 국민들이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며 순서 타령만 해서는 국민들의 불신만 더 깊어질 것이다. 더 이상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시간만 지체돼서는 안 된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등 책임 기관은 지금 진행 중인 KBS, MBC 경연진 교체를 통한 ‘공영방송 복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 선임 방식도 이제는 종영돼야 한다. 한 번에 완성되는 완벽한 ‘법’은 없다. 청와대와 여당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 이미 발의된 ‘방송법 개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박종석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편집주간 유주열	전화 02-3219-5637
편집위원 허슬기, 김지옥, 남태현, 최권용, 유의정	트위터 @kobetajournal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페이스북 @kobetajournal
인쇄인 SJC성전	홈페이지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 세미나 및 기술 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 방법

- 1년간 8만 원 / 6개월 5만 원
- 계좌 :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KOBA 2018
www.kobashow.com



28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28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8.05.15-18
COEX, SEOUL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KOTRA · MBC · SBS · EBS · OBS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음향학회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